

##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3812
----------	------

제안연월일 : 2009. 2. 12.

제안자 :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장

###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지원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투자를 더욱 확대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각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제안이유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고유가 추세 및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일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산업과 에너지 자립화의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음.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태양과 바람과 지열로 차를 운행하고 공장을 돌리겠다”고 천명하고 신재생에너지로 2012년까지 전기의 10%, 2025년까지 25%를 생산하고, 향후 10년 내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카 개발 등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신에너지 정책을 발표하였음.

2008년 12월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1990년 대비 20%씩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20-20-20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일본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60~80% 줄인다는 목표아래 태양광 발전을 2020년까지 10배로 늘리고 차세대 에너지 절약차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06년 기준으로 2.2%대에 머물러 미국 4.7%, 독일 4.9%, 일본 3.2%, 프랑스 6.0%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상태임.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의 내용 측면에서도 태양광과 풍력 등은 비중이 극히 저조하고 폐기물 이용

신재생에너지가 7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교토의정서 감축의무 대상국인 선진 38개국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제1차 감축에 돌입한 상황이며,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우리나라는 Post-2012 체제에서 감축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임.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선포하고, 같은 해 9월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09년 1월 신성장동력 17개 부문에 신재생에너지를 포함시킨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선진국들의 공격적인 투자 상황에서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정부 내에 기후변화 대책의 추진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투자 및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국민적 인식도 낮은 상황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